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 사회, 통일, 사진 담당)
 발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담당 : 김강연 사무처장 010-5590-9134)
 제목 [보도자료]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기자회견
 날짜 2019. 1. 24(목) (총 5쪽)

보도자료



2019년 1월 24일(목) 낮 12시, 주한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미국이 내야할 방위비분담금을 왜 한국인에게 떠 넘기나?

- 방위비분담금 12억 달러(1조 3천566억 원) 요구는 작년 대비 40.1% 증액된 금액
-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를 미국보다 5배 넘게 부담
- 다 쓰지도 못한 방위비분담금 1조원이나 남아 돌아

한반도 평화시대 역행하는 해리 해리스 미 대사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 횡포 규탄

방위비분담금 1조원이면 최저임금 일자리 5만개 만들수 있어

한국인 부담 가중시키는 불법 부당한 동맹비용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당장 철회해야

1.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타결을 앞두고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폭 인상 협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민변, 한국진보연대 및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 SOFA개정국민연대 소속단체 회원 30여명은 평화의 새 시대가 오는 때에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분담금 등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1월 24일 목요일 낮 12시 미 대사관저 앞에서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은 현재 9830억 원이나 남아돈다.”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5조4천억 원)가 미국이 부담하는 예산(1조1천억 원)보다 5배나 된다”며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카드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라고 비판하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발언 : 한총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발언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

발언 : 유영재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발언 : 김양현 (민중당 자주통일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식(한국청년연대) 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기자회견문 아래 첨부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기자회견문>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하라!

미국이 2019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으로 12억 달러(연간 1조3천566억 원)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를 요구했다고 한다. 12억 달러라면 2018년의 9602억 원보다 41.3%나 증액된 액수이고 1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7.7%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폭증한 2019년 한국 국방비 증가율 8.2%의 2~5배나 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 원(미집행 군사건설비 3292억 원,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 누계 5570억 원, 불용액 누계 968억 원)이나 남아돈다.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다.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5조4천억 원)가 미국이 부담하는 예산(1조1천억 원)보다 5배나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불법 부당하게 빼돌려 총당해왔던 미군기지이전사업도 종료되어 더 이상 대규모 군사건설비가 필요 없게 되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한미SOFA와 방위비분담협정에 규정된 주한미군 주둔 경비와는 관계도 없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며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이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압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례 없이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 휴직 예고 공문까지 보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한미SOFA에도 위배되는 미군주둔경비를 불법 부당하고 과도하게 부담하는 우리에게 이 같은 협박을 자행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의 2배가 넘는 17.7%나 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국방예산 증액 압박 요인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태반인 민생을 고려할 때 1조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한미SOFA 5조가 규정한대로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하여 1조원을 절감한다면 최저임금 일자리 5만개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은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어 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확립될 것이다. 남북 간, 북미간 적대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동북아에도 다자공동안보체제 구축 흐름도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의 물리적 실체이자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담보인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과도하게 쏟아 붓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미국이 협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3년으로 역제안 했다고 한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우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년 단위로 짧게 하는 게 필요하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협정 기간은 단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협정 기간에 대해서도 수세적이고 패배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자행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미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힘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4일

국민주권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새로운사회를향한연대, 새로하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협정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